

**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24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박성준 · 정춘숙
박홍근 · 신현영 · 강선우
윤관석 · 최혜영 · 이수진
전혜숙 · 이탄희 · 김홍걸
김남국 · 허종식 · 권인숙
오영환 · 장철민 · ~~이진비~~
김승남 · 강득구 · 윤후덕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“업종별 일반요율”과 함께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할 때에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“개별실적요율”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 · 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,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 · 위험 업무는 도급 · 파견을

활용하는, 소위 “위험의 외주화”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.

이에 도급·사용 사업장이 도급·과건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, 수급·과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·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비율”을 “비율(이하 “개별실적요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·관계수급인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·관계수급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파견사업주(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사용사업주(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)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.

1. 도급인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의무를

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

2.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

3. 도급인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

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비율(이하 “개별실적요율”이라 한다)-----

-----.

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·관계수급인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·관계수급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파견사업주(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
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③ ~ ⑩ (생 략)</u></p>	<p><u>서 같다) 또는 사용사업주(「과 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 사업주를 말한다)의 산재보험 급여 금액에 포함한다.</u></p> <p><u>1. 도급인이 「산업안전보건 법」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</u></p> <p><u>2.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 상 재해</u></p> <p><u>3. 도급인이 「산업안전보건 법」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 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 상 재해</u></p> <p><u>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 정일로 본다.</u></p> <p><u>⑤ ~ ⑫ (현행 제3항부터 제10 항까지와 같음)</u></p>
---	--